

# 광주·전남특별시 특별법 뭉 담았나... 312개 조문·300개 특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초안이 완성됐다. 총 300여 개 조문으로, 특별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특례법이 상당수 포함됐다.

광주시에 전남도가 실무 논의를 거쳐 15일 완성한 특별법 초안은 이날 말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 논의와 정부 협의, 공론화 절차 등을 거쳐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된 뒤 2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2월28일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문턱을 넘어설 경우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 후 7월1일 통합지방정부인 가칭 '광주·전남 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8편·23장·312개 조문...대전·충남 특별법과 비슷  
특별법 명칭은 가칭 '광주·전남 특별시 설치 특별법'으로, 8편, 23장, 312개 조문, 300개 특례로 구성됐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7장 21절 296개 조문, 257개 특례)보다 편·장·조, 특례 모두 조금씩 많다.

특별법은 목적으로 '광주정신'을 명확히 했다. 총칙 1조에 특별법 제정 목적으로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와 전남이 함께 이룩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광주시, 전남도를 통합한 특별시를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문화했다.

8편은 자치권 강화와 교육자치,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보칙과 벌칙 등으로 구성됐다.

23장은 특별시 설치와 지원위원회 설치, 중앙권한 이양과 규제자유화, 지방의회·자치행정·재정·경찰·감사위 강화와 함께 특별시 개발계획과 주요 첨단·전략산업과 문화·관광, 농수축산업, 기후·환경, 글로벌 투자, 공간계획, 광역교통·물류 기반, 사회안전망, 지역균형발전 활성화 등이 담겼다.

312개 조문은 이를 구체화한 세부 조항들도 구성됐고, 초대형 지방분권의 실효적 역할을 하게 된다.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수조원 재정 지원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반영,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사 역시 기존 광주·전남 청사를 활용토록 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특별시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 중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과격적 재정 지원으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100분의 12)을 가산해 20년간 추가 지원 하는 것을 비롯해 부가세 등 국제일부 지원을 통해 (가칭) 통합경

총칙 제1조 특별법 제정 목적에 '광주 정신' 명확히 명시  
명칭은 '광주·전남 특별시'... 연간 수조원 재정 지원 눈길  
에너지·AI·반도체·전략산업·문화관광·투자촉진 등 총망라



김기정(왼쪽)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 참석해 공동발표문을 들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제 지원금과 통합특별(교육) 재정보조금으로 지원토록 했다.

또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토록 했고,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를 '전남도' 기준(100분의 300)으로 적용하고, '균형발전기금' 설치와 지원, 대규모 사업 10년 간 예비타당성조사, 투자 심사 등 면제, 특별시 조례로 세액 감면과 세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뒀다.

국세 교부를 비롯, 통합특별교부금, 교부세 산정 제외 특례, 세액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혁신도시 개발,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특화단지 지정, 특별시 경찰청장 특별시장 동의제, 통합 소방본부 설치, 특별재단지역 선포, 특별시 통합교통계정 신설, 교원정원 설정, 영재학교 설립 등은 특례로 담았다.

이같은 조항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시와 전남도는 연간 수조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남은 절차는  
우선, 법안 초안을 토대로 민주당 입법 공청회가 15일 열렸고 16일에는 광주·전남 특별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시장군수 상생협의회가 열리고, 행정통합 추진 범시민협의회 발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지역별 순회 공청회가 19~31일까지 이어지고 시도의회와 시도민 의견 청취도 2월까지 진행된다. 특별법 발의는 이달말 민주당 당론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본회의 상정과 의결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월28일로 예상되고 있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가칭)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작업이 3월부터 본격화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통합지방정부인 광주전남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뉴스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만들어야”

김민석 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주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회의가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실천과 성과로 답하겠다”며 성과 창출을 위한 관계부처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홍보 추진전략과 산업 여건 및 전망,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및 인종규제 합리화방안,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대명 정부 집권 2년 차인 올해를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해’로 만들기 위한 국정운영의 전환점으로 보고,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 눈높이에서 충실히 전달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확대하는 등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수혜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는 한편, 디지털 채널과 인플루언서 협업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운홀 미팅, 현장 방문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홍보·여론 분석 도입과 정책 담당자 대상 정책 홍보 교육 강화를 통해 범정부 홍보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정책의 완성은 홍보”라며 “홍보를 국정운영의 핵심기능으로 인식하고, 국정홍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산업 여건 및 전망에 대한 산업연구원의 진단도 공유됐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했지만,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 심화, 과거 주력산업(철강, 석유화학 등)의 부진 등 위험 요인도 부각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인 ABCDE(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각 분야별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과 전략을 토론했다. 김 총리는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K-브랜드 열풍에 힘입어 값진 성과를 얻었지만, 안주할 수 없는 시기”라며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산업 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 건의사항을 검토해 창업벤처·신산업, 기업 고질규제, 행정규칙 숨은규제 등 3대 분야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 부담 경감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79개의 정부 인종제도를 검토해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도 내놴.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은 제2의 기습기살균제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단계까지 전단계 관리체계를 완성하는 향후 5년의 중장기 계획이다.

우선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제품만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모든 살생물 물질·제품은 안전성과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고, 안전관리 대상 생활화학제품도 지속 확대해 관리한다.

또 AI를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오용피해 예방을 위한 e-라벨 제품표시 도입, 연령별 맞춤형 체험교육·홍보를 추진한다. 제품 피해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해 위해·불법제품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뉴스

## ‘통일교 특검’ 이견 계속...與 “신천지도 같이” 野 “별도 특검으로”

여야는 15일 우원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상정 안건과 통일교 특검법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 여러 대화를 나눴지만

어색하게도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전 각 당의 회의를 마치고 시간이 되면 다시 만나자 정도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지금 통일교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다. (우리가) 통일교를 특검하자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 신천지를 해야 한다고 물타기를 했다”며 “우리는 만에 하나 하더라도 별도 특검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점을 분명

히 밝혔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이견이 있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 관련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의견을 더 좁혀보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은) 통일교도 특검하고, 신천지도 또 특검하자는데 그냥 통일교·신천지 같이 하면 되지 않나. 왜 분리하자고 하는지 납득이 안 돼서 그에 대한 합

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종합 특검법 외에 다른 법안 상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여야) 쟁점들도 있지만 민생 관련 법안들이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고 있다. 별도로 꼭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일관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전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35개 민생 처리 법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쪽에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

#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10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